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온난화 정책의 행방

아리마 준(有馬 純)

일본 동경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그런데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씨가 당선되었다. 그는 이전부터 Twitter 등으로 “기후 변화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경쟁력을 꺾기 위해 만들어 낸 날조(Hoax)라고” 공언해 왔다.

대통령 당선 후 환경보호국(EPA)의 인수팀 책임자로, 기후변화 회의파(懷疑派)인 마이런 아벨(Myron Ebell) 씨를 임명하기도 했고, 당선 직후 트럼프정권이 온난화 대책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취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작년 11월 말 트럼프씨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파리협정에서 이탈하는 데 대해서는 “열린 마음(Open mind)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온난화 대책) 기업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등 선거 기간에 비하면 “조심성 있는” 대답을 했다.

또한 12월 초에는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로 알려진 앨 어아(Al Gore) 부통령이 트럼프 타워를 방문하여, 트럼프씨와 그의 장녀인 이반카(Ivanka Marie Trump)씨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보도가 흘러 나왔다.

그 때문에 환경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권은 선거 기간 동안의 과격한 발언과는 모순되며,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도 그 나름대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12월에 들어서서 트럼프씨가 주요 각료 인사를 발표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제까지의 환경파에게는 기대감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청장에 지명된 사람이 스콧 프루이트(Scott Pruitt) 오클라호마 주 법무장관이다.

발전(發電) 부문에서의 저탄소화를 목적으로 오바마(Obama) 전 대통령이 도입한 클린 파워 플랜(Clean Power Plan)에 대해서는 미국의 28 개주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만 프루이트씨는 “지구 온난화의 정도와 인간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Consensus는 없다.”고 호언하며, 오클라호마 주에 의한 소송을 총괄한 인물이다.

또한 에너지장관에 지명된 릭 페리(Rick Perry) 전 텍사스 주지사는 “기후 변동은 인간이 자초(自招)한 것이기 때문에, 온난화 방지를 위해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쳐도 좋다는 논의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로 인해 기후 회의파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발언하고 있으며, 이 또한 온난화 의제(Agenda)에는 냉담하다고 생각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씨가 지명한 주요 각료 중 가장 클린해 보이는 사람은 국무장관에 임명된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Exxon Mobil의 CEO이다.

유럽계의 석유 및 가스기업인 Shell과 BP(British Petroleum)공사에 비해 미국계의 Exxon Mobil과



Chevron은 환경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다.

Exxon Mobil은 1990년대에 걸쳐 온난화를 부정하는 논진(論陳)을 포석한 로비 단체인 GCC(Global Climate Coalition)의 창립 단체였다. 그러나 2006년에 CEO로 취임한 렉스 틸러슨씨 하에서 궤도 수정을 도모하여 최근 Exxon Mobil은 온난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리협정도 지지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따라서 화석연료계의 거두(巨頭)라고는 하지만, 온난화 문제의 소재 그 자체를 의문시하는 프루이트씨와 페리씨보다는 상당히 낫다고들 한다.

확실히 틸러슨씨가 국무장관으로 취임함으로써 미국이 파리협정은 물론 그 기본조약인 기후 변화 범위 조약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견해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원래 기후 변화 범위 조약은 아버지 부시(Bush) 정권 시대에 비준된 것이다. 그 후 아들 부시 정권은 교토의 정서에서 이탈은 했으나 온난화 문제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기후 변화 범위 조약에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대책을 주도하는 기관은 국무부가 아니라 에너지부와 환경보호국이다. 이렇게 양 부처의 장급 진용의 면모를 보는 한 클린 파워 플랜을 포함

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국내 대책의 재검토 철회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를 비롯해 온난화 방지에 열의를 가진 주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

확실히 트럼프 정권 아래서 Clean Power Plan이 유명무실해져서 무력화(無力化)되더라도, 주 정부가 발전 부문의 배출 삭감에 대처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전 부문이 미국의 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Share)도 3분의 1 이하이며, 온난화에 긍정적인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배출량은 전 미국의 10% 미만에 불과하다(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입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할 것이다).

주 차원의 대책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소극적으로 되었을 경우의 영향을 중립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정권하에서 온난화 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각료의 의회 승인 절차와 향후 발표되는 예산안 등을 보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세계의 온난화를 위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감시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

